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3.15(금) ~ 2024.3.21(목)

제공일시 2023 03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3.15(금) ~ 2024.3.21(목)

제공일시 2024 03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中 레거시 칩 의존도 조사 착수... 美와 공동 대응 '수순'

- 4차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레거시(저가형)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손을 잡고 조사에 착수함
- 최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와 더불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한 전략적 견제로 풀이됨
-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실무 성명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역내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음
- 이 성명은 4월 벨기에에서 열리는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임

[\(해럴드경제 2024.3.19\) 원호연 기자](#)

2. EU 27개국, 공급망실사법 가까스로 승인... 적용기준은 대폭 완화

-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EU의 공급망실사법이 가까스로 무산 위기를 넘김
-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는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이 가결됐다고 밝힘
- 최종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이 EU 회원국 내 직원 수 1천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 4억5천만유로(약 6527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수정됐다고 AF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CSDDD는 이날 대사들의 승인에 따라 조만간 27개국 장관과 유럽의회가 각각 공식 승인한 뒤 발효됨. 실제 시행 시기는 2027년 전후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4.3.16\) 정빛나 기자](#)

3. 美, 전기차에 유리하게 연비 계산법 바꾼다

- 미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의 연비를 단계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도록 함. 연비 관련 규제를 고려해 기업들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도록 하기 위한 의도임
-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이날 전기자동차의 연비를 기존보다 낮게 계산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전기차 전비를 내연기관 연비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산 계수는 현행 1갤런당 82킬로와트시에서 2030년까지 1갤런당 29킬로와트시로 단계적으로 조정됨
- 미 정부는 이번 규정으로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판매 유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업계는 당초 논의돼 온 규제안보다 완화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임. 연비 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환경단체들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힘

[\(아시아경제 2024.3.20\) 변선진 기자](#)

4. “日정부, AI 개발자 규제 도입 검토...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응”

- 일본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자를 염두에 둔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자율적인 AI 개발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으나, AI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허위 정보 유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커지면서 AI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일본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전략회의'를 열어 AI 개발자를 겨냥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6월께 마련할 경제재정 운영 지침에 관련 내용을 넣을 방침임

[\(연합뉴스 2024.3.19\) 박상현 기자](#)

1. 20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 420조 녹색자금 공급/녹색투자 30조원까지 확대… 저탄소 체계 전환 가속화

- 오는 20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에 달하는 녹색자금을 공급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섬
- 420조원의 정책금융 재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자원과 기후대응 기금 등을 통해 조성함
- 탄소중립 달성 목표연도인 2050년이 다가올수록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보다 67% 확대한 60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임
- 환경부 역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녹색투자 방안을 마련함
-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녹색투자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함. 또,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함

(한국경제TV 2024.3.18) 신용훈 기자

(뉴스스 2024.3.19) 구무서 기자

2. “ESG 공시 부담 완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개발

- 정부가 내달 중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가 담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개발할 방침임
- 기업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임
-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해외 탄소중립 규제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기 위해서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
-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인 GHG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개발에 나섬

(아시아투데이 2024.3.19) 이정연 기자

3. ‘사용후 배터리’ 해상 운송 길 열린다… 정부 첫 연구용역 착수

-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로 구분해 해상 운송이 어려웠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마련됨
- 그동안 골칫거리로 취급됐던 사용후 배터리 해상 운송에 대한 안전 기준이 제시되면서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해양수산부는 ‘사용후 배터리 해상 운송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7일 발주함. 사업 수행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맡음
-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사용후 배터리 포장 용기 기준과 위험물 표기 방법,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비롯해 선주에게 사전에 고지할 목록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길 예정임

(이데일리 2024.3.14) 김은경 기자

4. 국내 ESG 공시 기준 스코프3 유예 가닥… SEC보다 ISSB 방향으로

-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4.10 총선 직후 국내 적용 ESG공시 초안을 발표하기로 함
- KSSB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도 공시 항목에 포함하되, 유예기간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정한 1년보다 길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ESG경제 2024.3.19) 이신형 기자

1. 셸, 탄소 감축목표 하향 조정... BP에 이어, 퇴보하는 화석연료 기업들

-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의 거대 석유회사인 셸(Shell)이 기후 전환 로드맵과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에너지 전환 전략 2024(Energy Transition Strategy 2024)'를 발표함
- 지난 2021년에 출시한 '파워링 프로그레스(Powering Progress)' 전략을 처음으로 업데이트해 내놓은 것임
- 새롭게 수정된 전략에는 스코프 3 배출량을 줄이려는 셸의 첫 번째 임시 목표가 포함돼 있음. 셸은 2030년 스코프 3 저감 목표를 이전의 20%에서 15~20%로 다소 약화시킴

(인팩트는 2024.3.18) 유미지 기자

2. 마이크로소프트, 408MW 태양광 PPA 계약 체결... 탄소 네거티브 행보 활발

- 지속가능성 미디어 ESG 투데이(ESG Today)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 프라이머지(Primergy)가 텍사스에서 개발 중인 408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향후 생산량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 현재 텍사스주 힐 카운티에서 개발 중인 애쉬 크릭 태양광 프로젝트는 3480에이커의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약 9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전망이다
- 프로젝트는 착공 후 완공까지 12~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수요에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300메가와트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추가될 계획임

(인팩트는 2024.3.14) 유인영 기자

3. TSMC, 애플 주도 복원기금에 660억원 투자... 탈탄소화 합류

- 삼성전자 경쟁사인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애플의 복원기금에 5000만달러(약 660억원)를 투자함
- 애플이 13일(현지시간) TSMC가 지구 생태계 보존 및 탄소 절감 프로젝트 '복원 기금(Restore Fund)'에 새로운 투자자로 합류했다고 밝힘
- 복원 기금은 2021년 애플이 주도해 국제보존협회, 골드만삭스 등과 함께 조성함. 산림 복원에 대한 투자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짐
- TSMC는 복원 기금에 5000만달러(약 660억원)를 투자함. TSMC는 성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모든 유형의 기회에 대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함

(디지털투데이 2024.3.14) 석대건 기자

4. 현대차 추월 목표 베트남 전기차 빈패스트, 아프리카 첫 진출

- 현대차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운 베트남의 전기차(EV) 메이커 빈패스트(VinFast)가 아프리카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함
- 전기차 전문 미디어 EV리포트는 빈패스트의 모기업 빈그룹(VinGroup)이 아프리카의 조스퐁 그룹(Jospong Group of Companies)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각) 전함
- 이번 제휴는 아프리카의 EV 승용차 시장뿐 아니라 스쿠터, 자전거, 버스를 타깃으로 함으로써 빈패스트가 가나와 서아프리카 지역에 전기차를 배포하는 것이 목표임

(인팩트는 2024.3.20) 홍명표 기자

5. 세계 최초, 에탄올 생산시설로 자발적 탄소시장 진입한 '레드 트레일 에너지'

- 미국 에탄올 생산업체인 레드 트레일 에너지(Red Trail Energy)가 에탄올 공장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VCM)에 세계 최초로 진입했다고 지난 11일 환경리더(environmental leader)가 밝힘
- 인증받은 프로젝트는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 기능을 갖춘 바이오 에너지 시스템과 결합된 에탄올 생산 공장임
- 이 공장은 에탄올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모두 격리시켜 주변 땅 지하에 영구 저장해 청정 에너지 컨설팅 플랫폼 퓨로닷어스(Puro.earth)의 레지스트리(registry)를 통해 탄소 크레딧 또는 탄소제거 인증서(CORC)가 발행됨

(인팩트는 2024.3.14) 김환이 기자

1. SK온,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 세웠다

- SK온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사업을 전담하는 해외 법인을 세움.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임
- 18일 업계에 따르면, SK온 헝가리 법인(SK On Hungary)은 작년 말 자회사 볼트사이클 온(Voltcycle On)을 설립함.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SK온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머니투데이 2024.3.18) 박미리 기자

2. 포스코, 인니서 CCUS 파일럿플랜트 운영... 국내 상용화 속도

-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제철공장에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CCU+CCS) 파일럿플랜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1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인도네시아가 CCUS 기술 상용화에 유리하다고 보고 파일럿플랜트를 지어 운영 중임
- 업계에서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기술은 이미 상용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됨. 반면, 탄소를 활용까지 하는 CCUS는 아직 상용화에 이른 사례가 포착되지 않았음
- 포스코 내부에선 현재 개발 중인 CCUS 기술의 상용화가 임박한 수준으로 보고 있음

(뉴스투데이 2024.3.18) 이재영 기자

3. 아이에스동서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 넓힌다

- 아이에스동서가 세계 최대 전구체 전문기업인 CNGR와 손을 잡고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영역 확장에 나섬
- 아이에스동서는 19일 CNGR과 배터리 리사이클 제품의 장기공급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아이에스동서는 최근 자회사인 아이에스비엠솔루션의 화성 전처리 공장을 준공했고, 이에 앞선 지난해 인수한 BTS 테크놀로지를 통해 폴란드에도 전처리 공장을 설립함
- 2차전지 시장의 성장으로 배터리 핵심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사의 이번 협약이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등 다각적 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임

(대한경제 2024.3.19) 김국진 기자

4. 美, 왜 삼성에 예상치 3배인 8조 쏘나... 반도체 패권 '전의 전쟁'

- 삼성전자가 미 정부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으로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해 미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음
- 15일 삼성 사정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칩스 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을 지급할 계획임
- 당초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지원금이 많아야 20억~30억달러(약 2조~4조원) 수준일 것으로 봄. 하지만 미국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 의사를 보이면서 파격적인 보조금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짐

(조선일보 2024.3.16) 김성민, 황규락 기자

5. "내 맘대로 트럭 크기·용도 변경"... '전기상용차 혁신' 나선 현대차·기아 [Car톡]

-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는 차량을 시장에 내놓음
- 공급자 관점에서 비슷한 형태의 차량을 대량 생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임
-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4일 전기 상용차에 적용할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선보임. ST1은 새시(차량의 뼈대)와 캡(승객실)만으로 구성됨
- 기아는 현대차의 ST1과 비슷한 의미로, 목적기반차(PBV)를 제시하며 사업 속도를 내고 있음

(서울경제 2024.3.17) 노해철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3.15(금) ~ 2024.3.21(목)

제공일시 2024 03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그린워싱 단속 그린클레임지침 본회의 통과... 그린워싱 규정 어길 시 연 매출 4% 벌금 내야

(임팩트는 2024.3.18) 김환이 기자

-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할 시에 이를 입증 및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에 대한 투표가 지난 1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의회 본회의에서 부처짐. 찬성 467표, 반대 65표, 기권 74표로 표결돼 유럽 의원들은 이번 제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23년 3월에 처음 제안된 그린 클레임 지침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그린워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됨. 이번 지침은 에코디자인 규정, 녹색 전환 및 순환 제 관련 내용을 포함한 EU의 불공정거래행위지침(UCPD) 및 소비자 권리 지침(CRD) 등 유럽위원회의 제안 패키지에 포함됨
-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을 주장할 때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신뢰 및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 탄소 상쇄 제도 사용만을 강조하는 친환경 주장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됨. 기업이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잔여 배출량에 대해서만 상쇄 제도를 사용하며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 따라 인증되어야 함
- 이번 규정은 대다수 유럽 사업체에 적용되며, 최소 입증 요건도 새로 도입될 예정임. 일반 유형과 달리 기업의 친환경 주장 및 증거는 최대 30일 동안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거칠 것임
- 앞으로 기업들은 제품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할 때 '생분해성', '저공해' 등 친환경을 주장하는 문구를 사용하기 전 제3자 및 독립 검증을 받아야 하고, 친환경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함
- 또, 입증된 환경 성과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친환경', '에코', '녹색', '지속 가능',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 '기후 중립' 등의 일반적인 환경 주장 사용도 금지됨. 중소기업은 추가 1년 동안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소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면제됨
- EU 성명서에서 환경위원회 보고관 사이러스 앵거러는 "오랫동안 소비자를 기만했던 그린워싱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럽 소재 기업들은 친환경 주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함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번 규칙을 위반할 시 공공 조달에서 제외되거나 기업 연간 매출의 최대 4%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영국, EU, 미국에서 기업들이 그린워싱 벌금이 연 매출의 1%인 것에 비해 4배 높으며, EU 전체 회원국에 적용됨
- 전 세계적으로는 총 17억1100만파운드(약 2조904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만약 기업이 EU 회원국 4곳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 매출의 최대 16%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음
- ESG 규정 준수 기술 플랫폼인 컴페어 에티クス(Compare Ethics) 추정에 따르면, EU 회원국 전체, 영국, 미국 등 전 세계 그린워싱 벌금 규정까지 고려하면 69억파운드(약 11조7113억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